

이상기후 대응과 창원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건의안

(진형익 의원 대표발의)



창 원 시 의 회

이상기후 대응과 창원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건의안

(진형익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43
----------	------

발의연월일 : 2025. 7. 21.

발 의 의 원 : 진형익 · 김경희 · 김묘정 · 김상현 · 김영록
김이근 · 김현일 · 문순규 · 박선애 · 백승규
오은옥 · 이천수 · 이해련 · 전홍표 의원(14명)

1. 제안 이유

- 대형 산불, 산사태, 폭염, 극한호우 등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이 빈번해지며, 국민의 생명과 일상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피해가 집중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예방 중심 대응체계가 시급함.
- 온열질환자 급증, 농축산업 피해, 정전 우려, 도심 침수 등 현실화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간 경보, 인프라 보강, 기상예보 고도화 등 체계적이고 사전적 재난관리 대책이 요구됨.
- 창원국가산업단지의 재생에너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기존 전력망과 변전설비는 한계에 도달. RE100과 산업전환을 가로막고 있어 국가적 차원의 전력망 확충과 예산 지원이 절실함.
-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전환이 창원지역 산업과 노동자에게 일방적 희생이 되지 않도록, 지역거버넌스 체계 속에서 고용안정과 권익 보호를 병행하는 ‘공정한 전환’ 정책 수립이 필요함.

2. 주요 내용

- 예방 중심의 재난 대응 체계로의 전환이 절실하며, 기초지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적 대응을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폭염 저감과 침수 예방을 위한 표준 매뉴얼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교부금 체계를 정비해야 함.
- 산업거점 지역은 현재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전력망과 변전설비는 이미 한계에 도달해 있어 RE100을 달성하려는 기업들의 투자 확대에도 장애가 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이미 제정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의 후속 조치로 시행령을 조속히 제정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주요 산업단지에 안정적인 전력 인프라가 조성을 지원해야 함.
-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산업과 노동에 전가되는 부담은 매우 크며 일방적 구조조정은 지역경제와 노동자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산업계·노동계·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거버넌스를 조속히 구축하고 산업의 지속가능한 전환과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권익 보호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계획이 마련되어야 함

3. 건 의 문 : 불임

4. 수 신 처 : 대통령비서실장, 대한민국국회의장, 국무총리실(의전비서관),
기획재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이상기후 대응과 창원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건의문

기후·생태 위기를 방치한다면 우리 모두의 생존은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이미 대형 산불과 산사태로 인한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 생태계 훼손은 현실이 되었으며, 앞으로 이와 같은 재난은 더 자주, 더 강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폭염은 이러한 현실을 더욱 가시화하고 있다. 온열질환자가 급증하고, 농축산물 피해는 물론 전력 수요 폭증으로 인한 정전 우려까지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짧은 시간에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극한 호우로 인해 도시 침수, 교통두절, 인명피해 등 재난이 반복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일수록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이와 같은 기후 재난은 더욱 빈번하고 심각해질 것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예방 중심의 재난 대응 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또한 기후위기 문제는 산업의 존속과 노동자의 삶,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의제다. 새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의 전환을 선언한 바 있다. 이는 기계·방위·첨단 제조업이 밀집한 창원국가산업단지와 같은 산업 중심 도시의 미래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과제다.

현재 창원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주요 산업단지에서는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전력망과 변전설비의 한계는 뚜렷하다. 이는 RE100 달성을 위한 기업들의 투자 확대에도 장애가 될 수 있어, 안정적이고 대규모의 전력 인프라 확충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산업전환 과정에서 창원산업과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탄소중립이라는 대의 아래 산업계·노동계·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창원산업의 지속가능한 전환과 창원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권익 보호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창원시의회의회는 다음과 같이 정부에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폭염·극한호우 등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폭염 저감(도심열섬 완화, 에너지 취약층 지원)과 침수 예방(배수망 정비, 하천 생태 복원 등)을 위한 사업에 대한 국가 매뉴얼을 개발하고, 교부금 체계를 마련하라.

하나. 창원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주요 산업거점 지역에 안정적인 전력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의 시행령을 조속히 제정하고 예산을 지원하라.

하나.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전환 과정에서 산업계·노동계·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공정한 전환 지원계획을 수립·지원하라.

2025년 7월 일

창 원 시 의 회